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03일 (화)
제 250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2.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4.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국회 외면 속 '청송' 6번째 단식농성

청송 피감호자,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모임'(이하 청송가출소자 모임)은 2일 낮 12시부터 청송 1, 2감호소에 수감중인 피감호자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 2감호소의 경우 전체 피감호자 300여명 가운데 2백 50명 이상의 피감호자가 단식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1감호소의 경우 단식 농성 참여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단식중인 피감호자들은 2일부터 개원된 임시국회 내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피감호자들의 절실한 바램과는 달리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의 회기 내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해 9월과 12월 서상섭, 최용규, 이주영 의원 등에 의해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쟁과 기타 현안 등에 밀리면서 몇 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기에 2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역시 '대선자금'을 둘러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과 4.15총선에 집중되면서 여타 민생법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청송 가출소자 모임 조석영 대표는 "이번 단식농성은 현행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분노"라며 시급히 사회보호법 폐지 일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의 김덕진 간사 역시 "사회보호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청송 가출소자 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각계 원로 및 대표자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범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사회보호법 폐지 청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를 공식 접수했지만 그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법무부 보호과 이용주 검사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 결정을 접수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기사 처음으로>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일그러진 과거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오전, 과거사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했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회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판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날 낮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가진 '민간인학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대화 및 법 제정 투쟁 보고대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관련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유족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는 '비록 본회에 상정되는 법안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법 제정을 앞두고 된 데에는 모두 감격해 했다. 증언대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사는 "나이 80되신 노인들이 이렇게 먼 곳도 멀다 않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며 반드시 이번에 법 제정의 결실을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사 관련 3가지 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 이장수 통합특별법 정책위원장은 "피학살자들과 유족들이 비로소 국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두고 "우리사회를 바로잡는 그 초입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사 법안 중 하나로 같이 논의되었던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끝내 법사위에서 반려돼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장수 통합특별법 정책위원장은 "친일반민족진상규명법의 반려는 바로 국회가 과거사 청산의 인식과 의지로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의 내용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유족, 인권사회단체는 과거사 관련 3가지 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사 처음으로>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길 위에서 부르는 평화의 노래

내일 도래면 일춘이다.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많이 남아있지만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있다. 평화유랑단 '평화바람'단원들이다. 왜냐하면 2월 11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2004년 평화유랑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평택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계획에 따라 용산미군기지를 시작으로 미군이 총집결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해 우리는 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특별한 제주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평화유랑단을 꾸렸다. 반미, 환경, 생태, 교육, 노동, 인권운동 등으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이 '모든 억압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큰 대의에 합의하고, 1년 동안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그동안 부당한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에 맞서 농성, 집회, 선전, 거리단식 등 '무엇이든 다 한다'는 각오로 거리에서 걸레처럼 취급되어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총부리를 겨눠도 상관없다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회의 여론을 접하며, 거리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다시 돌아보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눴기도 했다.

서울 인사동, 신촌, 대학로, 인천 등지를 다녔다.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자동차를 앞세워 밤마다 거리에서 판을 벌였다. 어색한 몸짓으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개사곡을 부르거나, 아마추어들이 만든 영상물을 틀면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시도했다. 옷을 있는 대로 끼워 입어야 할만큼 추운 겨울에 사람을 불러모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대중스타도 아닌 우리를 보고 누가 발걸음을 멈추겠는가! 그렇지만 우린 재미있고 행복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단다.

한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 '말걸기'였다. 모두들 왜 그렇게 바쁜지,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을 통해 할 새 없이 일한다. 말걸기가 너무 힘들어 사람들의 얼굴과 사람들의 행동을 오랫동안 바라보지만 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것은 관심도 없다. 소비사회적인 방식에 세뇌되어 시나 자연의 경이로움 혹은 음악을 즐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 생각한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 인간맞춤형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한달 동안 여정을 멈췄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에게 '말걸기'를 배우고 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드는 자만이 남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던가. 그래서 우린 지금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점차 뻗뻗한 몸, 어색하던 몸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녹여져 마음은 '예민함'으로 생기를 얻고 있다.

다음 주면 전국 유랑을 떠난다. 어린 시절, 동네 다리 밑에 모인 사람들 틈에서 약장수의 만담에 넋을 놓았던 기억이 난다. 너무 재미있어 학교에 가는 것도 잊었던 그 추억을 되살려 정성된 마음으로 평화순례를 할 것이다.

(오두희 님은 평화유랑단 '평화바람' 단원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1. 감옥 인권, 일보 앞으로

"수용자 취침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수면권 침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폭행 자살 자해 도주 등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비율 60%', 이라크 파병 지원자 접수 시작(1.29)/ 사법연수원, 파병반대 서명 사법연수생들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1.29)/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 결의대회 진행(1.31)/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비준 결사저지 시국농성 돌입(2.2)

3. 주목할 만한 판결 및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주한 미국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1.27)/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변호인 입회가 불허된 상태에서 작성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선고(1.2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땀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본 정부에 제일조선인 학생 차별에 대해 성의있는 시정 노력 권고(1.3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 황대권씨 '보안관찰 부당' 판결(1.30)/ 헌법재판소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차단 합헌" 판결-검열, 표현의 자유 등의 논란 불러일으켜(1.30)

4. 기타

1183일만에 꺼진 '부안 촛불'-핵 대책위 "공정한 주민 투표 위해 잠시 중단(1.26)/ 개정된 집시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대응수위를 높이며 해...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와 큰 충돌 예상(1.26)/ 제2의 글리벡 사태...보건단체, 비소세포성폐암 치료제 '이테사' 약가 인하 요구(1.27)/ 의문사 유가족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 돌입(1.28)/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8월부터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1.29)/ 국민의례 거부한 응시생 불합격 처리 논란...경기교육청, 학교조처 추진 움직임에 시민단체 "인권무시" 반발 (1.30)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후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04일 (수) 제 25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동성애' 심의 족쇄 벗어나 2. 이제는 '기술'이 검열? 3.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회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4. <알림>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동성애' 심의 족쇄 벗어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동성애가 정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이 실제로 개정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건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 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 '동성애' 삭제를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청보위가 정한 심의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 왔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인련 정을 대표하는 "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상징적인 것일 뿐이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국가가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실제로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그 효과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도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심의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음란성 등 다른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심는 표현물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일부 개신교계 등 관련 단체들이 반발할 경우 실제로 '동성애'를 삭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당시 성명서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권고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한기총 김청 홍보국장은 "지난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청보위에 동성애 조항 삭제 반대 의견을 넣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시행령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기사 처음으로>

이제는 '기술'이 검열?

현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

제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중 재판관, 아래 현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 법률이 최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이다.

현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결정을 둘러싸고 차단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현재의 결정은 기술에 의한 검열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인터넷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방식은 국가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수직적 통제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검열'이 진행되고 청소년은 오히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다보기> 인권위 위원들의 공적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11조 '퇴직 인권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원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 검찰, 감사원 등 다른 고위 공무원과 차별하여 공직 진출을 길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상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유감의 빛을 내보였다.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활동가는 "국가인권위법 제정 당시 고민을 거듭하면서 나온 결과인데, 인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송 활동가는 "인권위법에 위원들의 공무원임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한 것은 위원들이 정당 등에 연관되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법률적으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면이 없지 않지만, 인권위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부러 넣은 조항이었다"고 법률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인권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결정과 운영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의 위원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위원들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바람을 무너뜨리는 시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조항자체를 헌법적인 문제로 다루기 이전에 이 조항은 인권위 위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자체 장치 즉, 자기 통제 장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위원들 스스로 이것을 없애버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인권위원회 위원은 기회가 되면 고위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력에 '인권위원 했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8명이 국가인권위 결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정을 미루거나 관련부처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지난해 네이츠(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권고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에서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위원 개인이 정치권이나 현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법 11조의 위헌 결정은 인권위원과 권력의 거리를 좁히기에 충분하다. 인권위 위원들이 얻게 된 '자유'가 인권사안을 결정하는데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알림>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성과와 한계들을 공부방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공부방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공부방에서 진행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 때 : 2004년 2월 27일(금) 오후 2시~28일(토) 오후 2시(1박 2일)
- 참가대상 : 공부방 교사 및 자원활동가
- 참가비 : 2만5천원(숙박, 자료집)
- 장소 : 지하철 2호선 합정역 근처 '예수살이 공동체'
- 주요 프로그램 : 인권의 기본개념, 아이들의 인권, 공부방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차별, 장애, 평화, 환경, 폭력 등) 등을 공유하고 공부방에서 인권교육을 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전망과 도전 등을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 궁금한 내용은 인권교육실 담당자(김영원)에게 문의하세요. (02-741-5363)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화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05일 (목)
제 25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 1.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2.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3.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위인사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대로 탈퇴 유도 활동을 벌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수된 것. 박 씨는 91년 제3차개입금지 등의 법률 위반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했으나, 며칠 후 병원 뒤편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위문사위 김희수 상임위원은 "정부가 민주노조에 대해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문서는 90년 1월 노동부가 작성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징계의행위지도 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 경찰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관할 경찰청 공안 주임검사, 노동부 감독과장, 경찰서 대공과장, 안기부 조정관 등으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노협 소속 노조간부 접촉·설득 및 탈퇴 유도 등 순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3차개입금지 등으로 노조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 △전노협의 재정확보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가압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적극 검토 △근로자에 대한 의식화 교육강좌의 봉쇄 등이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에 정부의 조직적 방해와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91년 당시 전노협의 지역조직인 부산노련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연대회의'의 의장직을 맡고 있던 박 씨에 대한 정부의 회유는 이 문서의 발견으로 확실해진 셈이다. 의문사위 염규홍 제1조사과장은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큰 노조였던 한진중공업 노조는 전노협과 대기업연대회의, 두 조직에 다 가입을 했었고, 박 씨는 핵심적인 활동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전노협 대책반의 회유는 노조 간부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의문사위는 노조 와해공작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이 문서와 박 씨 죽음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16대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자"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우리는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다.....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회견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렸다.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회각계 원로와 인사 312인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등 사회 원로들 비롯해 정현백, 안성기, 홍세화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상중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세균 민중연대 공동대표 등 원로 및 인사, 인권단체활동가,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장은 사회보호법 폐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무고한 사람을 고문과 폭력으로 죽여가게 한 삼청교육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 시대 인권지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형법에서 정한 형벌을 다 마친 사람을 단지 재범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두어 두는 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황상의 서울대 교수 역시 "오랜 시간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모두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했다"며 "국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범구 의원(민주당)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사회보호법 같은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16대 국회 안에서 이 법의 폐지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이 소개의원이 되어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317명이 속했던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국회청원'을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개최됐으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의 상정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기사 처음으로>

언론 편견보도에 공동행동 나섰다

동성애자·HIV 감염인 <한겨레>에 정정보도 촉구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기사를 둘러싸고, 4일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이 <한겨레>신문사(아래 신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HIV 감염인을 위한 '세울터' 등 8개 단체들은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의 위험집단으로 간주한 기사에 대해 신문사측의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문사들 방문, 추운 날씨에도 피켓시위를 가졌으나 항의면담은 신문사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8개 단체는 미리 면담요청 공문을 보내 면담을 계획했으나, 신문사는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을 대표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공문을 보내면 1주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전했다. <본지 1월 14일자 기사 참조>

언론이 '동성애=에이즈' 편견 부추겨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최준원 대표는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관련 두 개 기사는 동성애자가 에이즈 위험집단이라는 편견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편견을 바로잡아야 할 언론에서 오히려 편견을 확대 조장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도의적 책임을 망각한 채 연구목적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기사화 하여 결국 설문조사에 응한 HIV 감염인과 동성애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HIV 감염인을 위한 모임 리브포원 박광서 대표는 "감염인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쯤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비감염인에게 생명과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면 이는 감염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한겨레>에서 감염인의 현실을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1월 7일자 인터넷 <한겨레>에는 "상당수 감염인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박 대표는 "감염인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수급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감염인은 보편을 적용 받아도 한 달에 50~60만원에 이르는 약값 지출로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안이한 <한겨레>신문사의 대응

이날 동성애자 및 HIV 감염인 단체가 한 목소리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집회를 한 것은 그동안 신문사가 보여준 안이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기인한다. 기사가 나간 후 이들은 공문과 성명서 등을 통해 신문사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신문사는 "사실 기사이기에 정정보도와 사과를 할 사안이 아니고, '왜냐면'을 통해 충분히 반론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운 부대표는 "반론의 공간을 제공했다고 해서 신문사가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자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왜냐면'이란 공간을 통해 벌어지는 논쟁은 동성애자와 HIV 감염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안중주 기자의 반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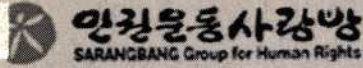
1월 8일자 <한겨레> 에이즈 기사와 관련하여 8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국립보건원(현 국가질병관리센터)은 해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팀

은 10일 해명서와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이달 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안중주 기자의 에이즈 관련 기사를 계기로 동성애를 에이즈 위험군으로 보도해 오던 언론의 편견에 쐬기를 박을 수 있을지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 처음으로>

재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06일 (금)
제 25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리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2.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3.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4.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생체 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미국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난달 5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사진과 양쪽 엄지 지문을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총영사는 '한국정부가 올 8월부터 생체인식정보가 담긴 여권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면제국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9.11 테러 이후,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각국에게 국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중진으로 축소되어 온 '국가감시'의 확장으로 평가하고, 초국적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윤 씨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번 제공한 생체정보는 바뀔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인권·사회단체는 앞으로 국가간에 이뤄지는 입국과 비자발급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미국정부를 향해 항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생체정보 포함 여권발급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문제를 지적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9일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추가파병 반대 운동이 여의도

전역을 감싸고 있다. 5일 11시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 10여개 여성평화 단체가 모인 '이라크파병반대 여성행동'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만일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도 열린우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 당 대표자들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검토하기로 예정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산출장으로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되었다. 면담에서 장의원은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그래서 국방위를 소집한 것이지만 추가파병 동의안이 줄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반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시 한나라당 규탄대회와 국방위 의원들의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9일 오전 10시 30분 국방위 방청과 11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잡아놓고 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국민행동은 국회 앞에서 노상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찬성 국회의원과 국방위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 처음으로>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면제하는 등 시설 복지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고, 인권침해 개선성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국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미신고 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철준 변호사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단체의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먼저 시설 개·보수와 인력 등을 차등 지원해 시설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생활자 인권보장매뉴얼 작성·보급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한편, 이 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복지부 복지정책과 박문수 씨는 "귀는 열되 입은 다물겠다"며 시종일관 입장 표명을 회피하다 "복지부 지침은 비록 불법적인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 처벌을 유예한 것"이라고 변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경우 정신보건법이 규정하는 전문의 진단서 등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행정부 지침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지켜 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할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인 방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내놓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대위 입장을 정리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풀 방키몽/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2000년 7월 9일, 인구 9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태어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2001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 소년은 돈이 없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세계 민중의 상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남반구에 살고 있고 단지 의약품이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르몽드지의 의학 칼럼리스트 폴 방키몽은 이 책에서 이렇듯 의약품을 둘러싼 '죽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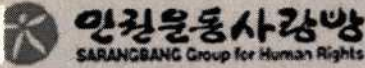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잊혀진 질병'과 시름하다 죽어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만나게 된다. 또한 제약 특허권이라는 무기를 세계화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거둬들이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의 실체를 낱알이 보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는 제약회사와 세계무역기구, 선진국의 횡포에 맞서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얻어내기 위해 세계 민중이 벌이고 있는 치열한 싸움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07일 (토)
제 250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2.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3.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4.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진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하여 이제 1천명 이하로 피감호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법에 의한 국가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24년째 지속되어 온 인권침해를 끝낼 책임은 국회가 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아예 법안 심의 일정조차도 잡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청송보호감호소' 그 오지에서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하는 피감호자들에게 국회는 이 법률의 즉각적인 폐지로 응답해야 한다. 그럴 때 국회는 최소한 직무유기의 책임만은 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

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가자 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나?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계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사무소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한다든지 여차피 불법이니,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농성단에서 조사 발표한 보털 씨(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이 비단 미등록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2003년 1월 입국한 보털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고용주가 '고용변동신고서'를 끝내 거부해, 고용안 전센터가 회사의 동의없이 보털 씨의 고용변동을 적용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족쇄가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제는 수당도 없이 9시까지 근무하고, 과거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도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옮길 수도 없다"며 "합법화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기사 처음으로>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비준안을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17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를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져 환경파괴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로 농약이 살포된 유전자 조작 외국농산물이 대량 유통되면, 국민의 건강한 삶은 공격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가로 119조원에 이르는 농어촌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몇 안 되는 기업농 육성을 통해 농촌까지 도시화하겠다는 것은 반농업적이고 반환경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반대 결의대회 및 한나라당 규탄대회가 외환카드 노조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 일대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계획돼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농민·시민사회단체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사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제8회 인권영화제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작년 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였던 사전제작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 제작지원의 주제는 '감옥의 인권'이다.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감옥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비뚤어진 인권의식 속에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은 방치되고 있다. 박영두 씨 사건처럼 그의 원한을 알리려는 동료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세상의 비밀로 남았을 것이다. 감옥은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멀고 또 어둡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인권 이슈인 '사회보호법 폐지' 역시 단식농성 같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세상을 향한 타전이 없었다면 '권리의 암흑시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의 인권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이슈'인 것.

감옥 인권은 또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난을 운명처럼 겪고 살아야 한다. 감옥의 인권은 갇힌 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감옥운동의 진보적 지점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감옥의 인권'에 대해 우리의 무던한 권감수성을 깨우쳐 주는 단비 같은 영화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올해 역시 인권영화제에서는 테이프 비용도 안 되는 적은 제작비를 지원한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이번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자재를 조건 없이 쓸 수 있도록 후원해 준다. 작년과 같은 결실을 이번에도 기대한다.

(지원작 : 4편/마감 : 2월 27일/문의 : 02-741-2407)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0일 (화)
제 250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2.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현이에게 보내는 편지
3. 주간인권포럼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밤 11시경 국회 처리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밖에서 1만 6천 여명의 농민·학생이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맞으며 한-칠레 FTA 반대를 부르짖는 4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찬반토론에서 유시민,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여론을 강하게 펼쳤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의원은 또 정부가 농민보호 대책으로 내놓은 4대 농업특별법에 대해서도 "우투과이라운드 농업개방 이후 이미 정부는 90조원을 농촌에 투자했지만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며, "앞으로 119조원을 온전히 농업에 투자한다해도 망해 가는 농가에 빛만 더 어둠을 더"이라고 비판했다. 농촌 출신 의원들도 '한-칠레 FTA가 통과될 경우 우리의 소농민들은 칠레 농업시장을 장악한 선진국의 거대한 자본과 경쟁을 벌여야 할 뿐 아니라, 곧 재개될 DDA 농업 협상은 물론 다른 농업대국과의 시장개방 협상에서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을 거듭 경고했다.

파병 동의안, 당론 엇갈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오후 5시경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국방위원 전체 14명 중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한충수 민주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3당의 당론이 서로 엇갈려 파병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 등 파병반대국민행동 대표단은 이라크 파병안 처리를 반대하며 장영달 국방위원장의 출석을 저지하는 행동을 벌였지만 국방위 회의를 무산시키지는 못했다.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30분 뒤에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침략전쟁의 절령군이라는 본질에는 침묵한 채 오로지 파병을 위한 명분 찾기에만 열중했다.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의의 대부분은 재건사업을 통한 국익에 초점이 맞춰졌고, 일부 의원들은 해병대 파병의 증원을 요청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대가 파병되는 키르쿠크 지역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고, 전후복구 사업 참여 역시 불투명한데다 주둔 기간이나 소요 예산 역시 예측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국회 앞, 농민들 거센 저항 이어져

국회 안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논의가 진행되는 내내 밖에서는 농민·학생·사회단체 등이 경찰과 대치한 채 늦도록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오후 2시부터 문화마당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전국농민연대 송남수 상임대표는 "농업을 팔아 나라의 부를 일으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FTA를 찬성하는 의원은 매국노로 규정하고 옹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주도한 위원장도 "한-칠레 FTA 국회비준저지 운동에 농민과 노동자가 따로 없다"며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오후 3시 40분 경부터 농민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하여 이라크추가파병 국회통과 결사저지 결의대회를 끝낸 1천여 명의 시위대와 합류, '한-칠레 국회비준반대, 파병동의안 통과저지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오후 4시부터 진행하려던 집회는 경찰의 방해로 1시간 30여분 가량 지연되었다. 이날 경찰은 80여개 중대 9천여 병력과 수 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 쌌으며,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난사하고,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소음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전정터를 연상케 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참가자들은 "경찰폭력 중단하라"를 외치며 거세게 저항했다. 이날 80여명의 시민·농민·학생들은 머리카락이 찢기는 중경상을 입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가파병안과 한-칠레FTA 비준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지며, 이날의 집회를 마무리했다.

<기사 처음으로>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현이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 개학했을 테니, 학교에 잘 다니고 있겠지? 공부방에도 매일 매일 나와서 환이하고 열심히 장난도 치고..

처음에 푸른교실을 찾아가서 현이와 친구들은 만났을 때, '인권아 놀자? 인권이 뭐예요?' '인권 공부 시간이예요?'라고 물으며 선생님들을 쫓아 다녔었는데... 지금은 현이가 인권이 무엇인지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걸.

현이야! 쿠엔과 마이클, 양송이가 기억나니? 차이·차별을 구별하던 시간에 현이하고 친구들이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쿠엔', '키180cm에 백인이면서 학교성적은 평균 90점 이상인 마이클'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던 성수'가 되어서 학교에 입학도 하고, 회사 면접 시험, 공학출입도 해 봤었지. 처음에는 푸른교실 친구들이 무척 재밌어 했는데, 나중에는 화를 '씩씩' 내며 "차별이 싫어"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것'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시간에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0번이라는 짧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인권교육이 끝난 다음에 아쉬운 마음이 컸어. 시간이 많았다면, '인권아 놀자'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나누고, 푸른교실 친구에게 인권을 잘 이야기 할 해줄 수 있는 여러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을 텐데하고 말야.

우리나라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현이는 아직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에는 현이처럼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으니, 직접 만난다면 몽골이나 네팔의 친구들이 어떤 놀이를 하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부안에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핵폐기장이 왜 위험한지, 핵발전소가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대안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겠지?

이제는 현이와 친구들이 함께 알아가야 할 것 같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다루던 시간에 현이가 했던 말, 기억하고 있니? 지하철 계단에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승강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칸막이를 만들고,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해달라고 하면 이뤄질까요?"라고 물었잖아. 그때, "앞으로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나는 친구들에게 계속 인권을 얘기 해주자"고 했었는데, 현이는 그렇게 하고 있니?

선생님들도 그때 약속을 생각하면서 다시 공부방 친구들을 만날 참이야. 푸른교실은 아니지만 올 봄에 공부방에서 인권교육을 하기로 했거든. 푸른교실 친구들에게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때때로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컸어. 그래서 말야, 앞으로 만나는 친구들에게는 더 쉽게 인권하고 놀 수 있도록 할 참이야. 아, 그 친구들이 부럽다고?

다시 만나면, 그동안 현이가 보고 생각한 인권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무척 궁금해하는 걸. 건강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

(고근예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기사 처음으로>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1. 이라크 추가파병·한-칠레FTA '절대 반대'

3당대표,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 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나선운동 불사"(2.5)/ 농민·환경·사회단체 FTA 비준 '절대 반대', 국회 앞 한 목소리(2.6)/ 파병 동의안 국방위원회 통과,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 움직임 맞서 농민들 저항...국회 진통 속에 처리 미뤄져(2.9)

2. 과거사법 통과, 발목 잡는 네 이능!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나'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일제강점하강제동원등에관한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동학농민혁명공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국회 통과 돼(2.9)

3. 동성애, 편견을 제치고 한 걸음

청보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입법 예고(2.2)/ 동성애자·HIV 감염인, 동성애를 에이즈 전염 위험집단으로 간주 보도한 <한겨레>에 정정보도 요구(2.4)

4. '청송'의 목소리를 외면 말라

사회보호법 폐지만, 법제사법위 안건 상정도 안된 상태, 청송 피감호자 6번째 단식 농성 시작(2.2)/ 사회각계 원로·인사 312인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자"며 '사회보호법 폐지' 선언 발표(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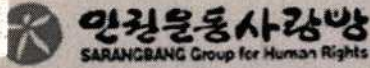
5. 기타

'KAL기 폭파 사건'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혼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조사 중 노태우 정권 당시 '전노협 대책반' 운영 확인...법정부 차원에서 노조 탈퇴 종용한 사실 드러나(2.4)/ 미,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1일 (수)
제 250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2.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3.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4.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지난 달 26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농성단은 △강제 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는 그해 11월 16일부터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단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1월 17일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현실성 없는 허울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출국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농성단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천여 만원이 넘는 큰 돈을 주고 왔는데 이는 한국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인력송출업체, 중기협으로 구성된 비리커넥션 때문이므로 비리카르텔의 뿌리를 뽑아 입국비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급이 반으로 줄어도, 구타를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농성단은 "절망을 향해 자진출국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안은 자진 출국하는 노동자들에게 1순위 심사를 보장하는 각서 하나도 약속하지 못하는 믿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비판하며 자진출국 거부 운동을 지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문은 의원님들만 다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지난해 가을인가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늦겠다 싶어 여의도 전철역에서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손님을 내려

주었다.

'이크,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예전에 들어가던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 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랴부랴 정문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한 직원이 가로막고서는 못 올 곳에 왔다는 듯한 태도로 뒷문으로 가라고 말했다. "여기도 문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따져 묻자 방문객 신분확인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이란단다. 실랑이를 계속할 시간이 없어 '어디 두고 보자' 씩씩거리며 그 큰 건물을 한바퀴 돌아 결국 뒷문을 찾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국회 본청에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건물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 앞에 자가용을 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정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말이다. 민원실을 뒤편에 두어 의원'님'과 방문객이 드나드는 문을 달리 차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만 국민 위에 고압적으로 군림하려드는 국회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다.

지인에게 들으니 사법연수원의 강의실도 앞문은 교수용, 뒷문은 학생용으로 버젓이 구분해 놓았다고 한다. 어느 학교에서는 중앙 현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교장과 장학사뿐이고, 학생들은 오직 청소할 때만 현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한다. '뒷문'으로만 드나들어야 하는 이들의 신세는 가게 뒤편에 나 있는 쪽문을 통해서만 음식을 간신히 사먹을 수 있었던 인종분리시대 흑인들의 신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신분의 위계는 드나드는 문에도 격을 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상화된 차별에 둔감해지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 날의 두고 보자던 결심은 어느새 바뀐 일상에 묻혀 잊혀져가고, 이제 국회를 찾아갈 때면 발길이 절로 뒷문 쪽으로 향한다. 여러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된다고 했던가. '뒷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내야 한다.

<기사 처음으로>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사상을 심판하는 비상식적인 재판에 해외인사들의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며, 그간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를 소개했다.

이미 지난 12월과 1월 유럽과 일본의 각계 인사 1천2백여 명이 석방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독일 각계 인사 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한스 크리스트리안 스트뢰벨레 독일 녹색당 국회의원도 포함됐다. 스트뢰벨레 의원은 탄원서에서 "송 교수를 기소한 근거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이미 유엔과 유럽의회에서 법치국가의 근본원리에 합치하지 않는 법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그와 같은 법에 의거해 자유를 박탈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송 교수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은 결코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며, 송 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탄원했다.

송두율 교수는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이 사상·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대명제에 또다시 칼질을 가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안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식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홍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법은 지난 7일, 3당 원내총무 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6.25)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홍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제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 30개 보수우익단체는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이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범국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법의 제정은 국민화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의 미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홍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이 피학살 원혼과 50여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질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통합특별법쟁취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보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허물기'와는 다른 법"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국민위원회는 법 제정을 위해 남은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13일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피해자 및 유족,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갖기로 했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아래 동학농민혁명특별법) 등 과거사 3대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겨졌다. 그러나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3개 법안 중 동학농민혁명특별법만이 통과됐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2일 (목)

제 251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의 하루소식
하 소식 자세히 찾기
하루소식 주제별 찾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2.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3.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4. 인권하루소식, <프레시안>에 기사 제공하기로

물대포 쏘기, 방패찍기는 경찰의 특기?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중요 씨 등 1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민중연대는 10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상해를 입힌 경찰 및 상급책임자의 엄중 처벌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해산중심의 공격형' 경찰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80여 개 중대 9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이날 4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물대포를 쏘고 집회연단까지 난입하여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다. 또한 경찰은 집회 대열 중간으로 진입,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영수(의정부청년회)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다. 일몰 후 시야가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집회 해산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갑작스런 공격은 무방비 상태에 있던 수십여 명의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때 연행된 농민 배익수(완주농민회) 씨는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 야할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남용하여 집회장을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분개했다. 배 씨는 "방패에 머리가 찢긴 채 전경차에 40여 분이나 감금당했다"며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배 씨는 마포경찰서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후에야 경찰의 입회 하에 머리를 12마늘 껌매는 응급치료를 받았다.

최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행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박태군 상임활동가는 "경찰은 집회를 하기도 전에 불법 폭력 집회로 예단하고 시위대를 해산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의 임무는 집회를 보장하는 일인데 오히려 경찰이 폭력을 일삼아 집회 참가자의 강력한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전농 등 사회단체들은 9일 집회로 부상을 입은 사례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고발과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사 처음으로>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자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도현의 경우 현재 유사한 사안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장애인들이 생계 및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이동권을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제반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석 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질서와 법적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의 기본이라도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장애인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장애인들의 정당한 수단을 넘은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도현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 광화문역 선로에서 벌어진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이광섭(지체장애1급) 씨의 1인 시위를 돕다가 그해 8월 시위 주동 혐의로 구속돼 6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경석, 박경희 씨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법원의 선고로 집행유예기간 중 구속된 김도현 씨의 조속한 석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유죄선고에 항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기사 처음으로>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씩 묶은 그룹 서버로 개인정보 영역을 관리한다'는 다수안을 10대 5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임으로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을 막기 위해서는 31개 학급 이상의 초·중학교에 한해서도 독립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교의 학생정보를 한 서버에 묶어 서버의 수를 줄이는 데만 열중하며 개인정보영역 분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해왔다"고 비판한 후, "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운 합의과정 끝에 나온 결정인 만큼 서버운영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 서버구축 비용을 부풀리며 학교별 독립 서버의 확대를 반대해 온 교육부가 고집을 꺾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입력항목 조정'이나 'CS로 운영하는 학교 지원' 등의 문제들은 아직 최종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해를 훌쩍 넘긴 네이스 문제가 '정보인권 지키기'로 일단락 될지, 이번 결정 사항에 대한 국무총리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이제부터 <프레시안>을 통해서도 인권하루소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9일 <프레시안>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주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프레시안 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인권하루소식은 <오마이뉴스>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홍보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한 항의의 표시로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레시안>과의 기사 제공 계약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특정 정책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프레시안>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하루소식이 더 폭넓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3일 (금)
제 251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 권 하 루 소 식
하 루 소 식 자 세 히 찾 기
하 루 소 식 주 제 별 찾 기
만 화 사 랑 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2.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나!
3.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4.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검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했다. 12일 오전 10시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 천안, 경기서부 지역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검경의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검경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원청(본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산업안전 미비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당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명(1명 석방), 천안건설노조 2명(1명 석방)이 구속됐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1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중 경기서부건설노조 11명은 65일째 명동성당에서 '검경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협박 없었다' 관리자 측 증언

경기서부지역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관리자 측에서는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했을 때, 타 사업장을 본보기 삼거나 본사와 논의 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관리자 측)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서부지역 S현장에서는 노조와 단체협약 논의가 있던 2002년 4월경 '안전문제에 대해 1차적으로 노조에서 걸러 줄 수 있기에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리자가 본사에 단체협약 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전임금 지급문제 역시, '본사 범규팀 검토 후에 전임금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관리자 면담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노조가 산업안전 미비를 빌미로 하여 회사측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경의 주장을 뒤엎는 조사 결과이다. 기타 지역에서도 단체협약과 관련해 노조의 협박이 있었다는 관리자 측 증언은 없다는 게 조사단의 보고이다.

짜 맞추기 수사

특히 이번 진상조사에서 검경의 짜 맞추기식 수사의혹이 한층 강하게 제기됐다. 경기서부지역의 경우 '노조로부터 협박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현장관리자들에게 경찰이 유사한 질문을 던지며 5시간 이상 조사했다는 진상조사단의 보고가 그것이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씨는 "경찰이 노조의 은행계좌를 통해 (노조 전임비) 입금자(회사)를 찾아낸 다음, (그 회사에) 노조위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끼워 맞추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첩보,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전건설노조 재판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했다 것으로 되어 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건설일용노동자와 건설원청(본사)업체 사이의 단체협상은 법

적 근거가 없다'는 검경의 주장에 대해 조사단은 "하도급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대한 검경의 무지를 지적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 책임, 당연한 것

윤에팀 씨는 "산업안전 미비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시정요구나 이러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감 자체를 협박이라고 파악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도 협박이 없다고 못할 것"이라며 검경의 비이성적이고 무리한 수사에 즉각적인 단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검경의 수사 중단과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하며,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역에서 있을 첫 선고 재판을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처음으로>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가격이 환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65,274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서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당 65,274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3차요법 환자들은 한 달에 40여 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2차요법까지는 한 달에 약 195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지불하게 됐다.

이에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아래 보건의료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레사 가격결정은)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 'OECD 선진7개국의 공평출하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레사의 보험적용에서 2차 요법 환자를 제외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폐암환자들이 한 달에 195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이레사'를 복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복지부는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들조차도 적용기간을 6개월 또는 9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상덕 간사는 "정부가 다국적 기업과의 협상력을 키워서 약값을 내려 환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이레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험급여 적용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연합은 합리적인 약가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으로 '보험가입자대표로 구성된 약가제도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7개국을 기준으로 신약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강보험에 전가되어, 환자와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클리백과 같이 약을 눈앞에 두고도 약값이 없어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이레사'를 얻기 위한 폐암 환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지은이: 김의석 외/ 펴낸이: 우리교육/ 160쪽/ 2004년 1월

제조업 공장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혹은 생계 유지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단

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간 일터는 여전히 감독기관의 축소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기방어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노무사들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한 공인노무사 수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혼란과 혼란 인권침해에 맞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노동법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한 달을 못 채웠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다 산재를 당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폭행이나 폭언·성희롱을 자행하는 경우 등 인권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사례 묻고 답하기를 통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기댈 언덕'으로 소개하고 있는 노동법 관련 기준들이 가진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일, 나아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현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기사 처음으로>

<광고> 정보인권 공개세미나

- 일정 : 2월 13일 ~ 4월 14일
- 주최·장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신청·문의: della@jinbo.net
- 전화 02-774-4551
- 내용
- 1. 기술과 사회 (2/13)
- 2. 디지털 정치경제학 (2/27)
- 3. 정보화와 정보운동 (3/5)
- 4. 인권과 인권운동 (3/12)
- 5. 표현의 자유 (3/19)
- 6. 프라이버시와 반감시 (3/26)
- 7. 정보공유 (4/9)
- 8. 접근권과 종합토론 (4/16)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4일 (토)
제 251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2.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3.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오늘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가져분신청 등 온갖 방해물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부안 주민들이 반핵의 의지를 직접 밝혀려는 것이다.

오늘의 투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난해 7월 부안이 핵폐기장 유치 장소로 선정된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투표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지난 6개월의 반핵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의 선택 역시 반핵. 그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공간이 되었다. 물고기가 떠난 바다, 황폐해지는 산과 들, 늘 위험을 떠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과 동물... 삶터가 바뀌고 상시적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부안 주민들의 자각이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넘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부안 주민들이 알려준 정부 핵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교훈이다. 과연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 물어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환영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이 땅 어느 곳에도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핵폐기장은 누군가 선택해서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되고 끝날 수 있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생존과 생명이 연결된 양보할 수 없는 전체의 문제이다. 이는 부안 주민들이 긴 싸움에서 얻은 교훈이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대안은 바로 부안의 아이들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피켓에 이미 나와 있다. 다름 아닌, '해님도 바람도 일하고 싶어해요' 그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의 파병 반대 외침을 외면한 국회와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함께 '확실한' 침략전쟁의 공범자가 되었다.

13일 오후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찬성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인 3천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병하게 되며, 이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국회 밖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파병결사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던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와 개탄을 모아 국회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가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러 이 나라의 젊은이를 더러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망국적인 결정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파병안이 통과됐지만 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파병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결의를 다졌다. 국민행동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지 1년이 되는 3월 20일 전 세계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거센 반전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애써 파병부대가 '재견지원 부대'라고 위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실상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제3의 전범국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씨는 "미국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보냄으로써 국내의적으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며 "국내에서 이런 흐름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라크 내에서 점령군은 이라크 민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표적이 될 것이다.

<기사 처음으로>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 기관사의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관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만난 도시철도노조 정운교 노동보건국장은 "현재까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기관사만 12명에 이르고, 지난해 8월에는 2명의 젊은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비통하게 전했다. 정 국장은 "이들 모두 입사할 때 받는 정신건강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임을 강조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많은 기관사들을 정신질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인제대가 도시철도 노동자 천2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노동자의 45.2%가 우울·불안·의욕상실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80.6%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전체의 40%가 넘는 기관사들이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나타났다.

1인 승무제가 정신질환 불러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이 이처럼 위태로워진 데에는 1인 승무제도와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용 연구원은 "강한 소음과 사고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달려야 하는 기관사의 고유 업무상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기관사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는 1인 승무제도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이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산업의학과 김정연 의사도 "1인 승무제도로 인해 기관사들이 운행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시달리고,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혼자 고립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함으로써 심각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유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1인 승무제도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높다. 윤성호 기관사는 "빈번한 출입문 사고 등 일단 사고가 나면 사령실에 보고하고, 승무일지에 기록하고, 객실에 방송을 하고, 운전실과 사고현장을 뛰어다니며 사령실의 지시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의 기관사가 10분 이내에 끝내야 열차 지연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때문에 '분, 초'를 다투는 열차 운행에서 기관사들의 긴장감과 불안감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승객을 친 사고의 경우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시신 수습을 한 후 서둘러 고대 근무지까지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살인적 인력감축, 노동자 건강 위협

1인 승무제도에 더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윤 기관사는 "기관사들은 보통 한 주에 주간근무 3번, 야간근무 2번을 번갈아 하는데 작업장 체류시간이 주간에는 보통 10시간, 야간에는 14시간 정도"라며, "여유인력이 없어 병가를 내기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공사 측

이 휴직이나 퇴직으로 생긴 빈자리에 제대로 충원을 하지 않아 한 달에 4일 반나절인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 중압감과 불안이 제때 해소될 리 없다.

실제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6년 개통된 이래 지속적인 구간 확장에도 불구하고, 99년에는 오히려 1천7백여 명의 인력을 감축시키는 등 노동자 1인당 담당 업무량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더해 2002년 12월에는 겨우 백 명의 충원으로 야간 1시간 연장 운행이 실시되었다. 정운교 안전보건국장은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라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 방침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건강은 물론 시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1인 승무제도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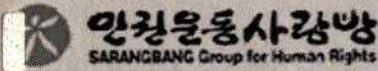
도시철도노조, 국가인권위에 질의

지난 10일 도시철도 노조는 기관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노동권 등 사회권 영역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젊은 기관사의 목숨을 앗아간 노동조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 처음으로>

제보 및 의견 | [어제의 인권하루소식](#) | [인권하루소식 검색](#)

위로



인권교육 | 인권정보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기획활동 | 인권영화제 | 감옥인권 | 인권운동연구소

인권하루소식

일간(2면발행, 일·월요일 제외)

창간 1993년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2004년 02월 17일 (화)

제 251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김영원 김정아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오늘의 하루소식

하루소식 자세히 보기

하루소식 주제별 보기

만화 사랑방

<오늘의 기사 제목>

1.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2.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3. 법원, 검찰 손놓고 비정규직 외면
4.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유죄판결
5. 주간인권흐름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는 허망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도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벼랑 끝에 서서 저항하는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민들에게 FTA가 물고 울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낮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5백만원)나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해마다 십여 건씩 보도되는 농민들의 자살이 그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가 이러한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다국적 농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이다. 칠레는 포도, 자두, 키위 등의 수출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과일들의 연평균 가격 수준은 우리의 5-2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정책부장은 "FTA는 과실 농가들의 연쇄적인 파산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특정 품목에 생산이 집중될 경우 과잉생산이 초래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농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FTA를 비롯한 농업시장 개방 정책이 예고하는 재앙은 농민들만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회진보연대 류미경 정책부장은 "세계 농산물 유통량 80%를 5개 곡물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방은 한 국가의 식량 생산과 공급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몇 개 기업에게 맡기는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시장개방 초기엔 값싼 농산물을 살 수 있겠지만, 식량 자급율이 떨어질수록 식량에 대한 가격 통제력을 상실하게돼 소수의 초국적 농기업들의 이윤논리에 식량이 필요에 따라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정책부장은 "이러한 농업시장 개방의 위험성 때문에 WTO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에서 미국, 유럽연합 등 농업대국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보조금 유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업개방이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FTA는 통과됐지만 농업개방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사 처음으로>

명동성당 농성단 대표 샤멀타파, 표적 연행

농성단·인권단체, 출입국관리소 앞 규탄집회